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정치권,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

의료계 거부에 정책 책임자 문제 거론
與 일각 “‘경질’ 정치적 모양 취해야”
야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동훈 “신속 출범... 전제조건 안돼”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자,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내 일각에서도 교체론이 계속 거

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협회가 여야 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들어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개혁에 뜻을 보태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의 경질”이라며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의) 경질이라는 모양을 정치적으로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친한계인 김중혁 최고위원, 원외 소장파인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도 지난 5일 박 차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

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도 “조건을 자주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을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 없이 폭넓

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신속한 출범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은 다 모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의체의 의제는 ‘국민의 건강’ 딱 하나”라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책임자 문책과 사과가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내일 본회의서 ‘지역화폐법’ 처리

채상병·김건희 특검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전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판 사업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며 “선거법은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협상 상황 등에 따라선 12일 본회의에 일부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중 지역화폐의 경우 30%가 적용되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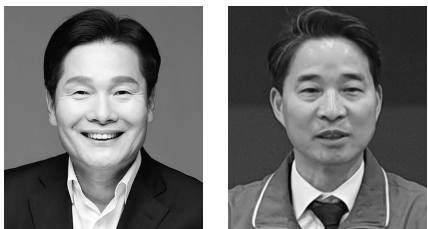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철현·송순호 검토

막바지 단계... 오늘 발표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 의원(여수·갑)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이르면 11일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다.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10월16일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과 협지인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때문에 지역 안배가 최우선 고려됐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직능 안배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기 지도부가 수도권 인사들로만 채워지면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선 방향을



주철현



송순호

지역 안배로 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16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호남출대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를 잠재워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여수시장을 지내 행정 경험이 많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경남도의원을 지낸 민주당 원외 부대변인이다.
민주당은 11일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세계지식포럼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매일 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새미래민주 “빛고을 정신으로 비정상 정치 돌려놓을 것”

광주서 ‘제2창당’ 선언

지난 총선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창당했던 새로운미래가 10일 광주에서 ‘새미래민주당’으로 당 이름을 변경, 재창당을 선언했다.
새민주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불통으로 후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빛고을 정신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의 2년 5개월 간 방탄과 탄핵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물가폭등 등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의 미래는 더 절망적이다. 청년실업자는 407만을 넘어섰고 미래 일자리를 만들 R&D 예산은 대폭 줄었다. 암울하고 고단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새민주는 민주당이 ‘호남인들을 가stra 이팅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민주당 대선 패배는 후보자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이다. 민생 지키기보다 이재명 지키기에만 올인 중인 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이재명 일국체제로 전락한 가짜 민주당을 대체할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당내 모든 역량을 모으고 민주당 안의 양심파, 조국혁신당, 애국적 시민세력과 함께 민주세력 재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16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총선 이후 재창당을 준비하면서 후보를 낼 여력이 되지 않았다. 내년께 모든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재선거에서는 범 민주진영 정

권탈한 기반 확보를 위해 조국혁신당 등과 연대할 의지가 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총선 낙선을 거론하며 “조직화한 가짜뉴스에 호남 정치가 무너지고 호남이 키운 정치자산이 상처를 입었다”며 “비정상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광주의 힘이 필요하다. 부족하지만 새민주가 호남 대선 자산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민주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새민주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김종민 의원이 지난 1일 탈당하면서 원외 정당이 됐다.

정성현 기자

광주 온 조국 “호남 유권자 선택지 넓히겠다”

시의회 기자회견·영광 방문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월세 살이’를 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과 겨뤘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좋은 점만 있다. 호남에서의 경쟁이 더 좋은 후보와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은 대선이 아니다. 결

국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재선거 경쟁은) 민주진보진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재정과 조직 모두 부족하지만 지방정치 혁신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정당당당히 선거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 국회의원 12명 모두 군수라는 마음으로 뛰고 성과와 관계 없이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 소속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곳에 공정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국성군 선거의 경우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다시 치러지는데 당규를 바꿔서까지 후보를 낸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혁신당은 영광과 곡성 모두 100% 국민경선을 해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줬다. 지역마다 후보 유불리에 따라 공천물을 상이하게 두는 민주당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영광군 법성면 굴비 거리에서 상인들을 만나 어민 보호와 지역발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후 7시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초청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성현 기자